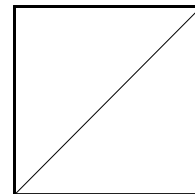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19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3. 10. (제 5 차)	

한국투자증권(주)에 대한
부문검사 결과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 원 장 도 규 상
제출 연월일	2022. 3. 10.

1. 의결주문

한국투자증권(주)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하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별지>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.

2. 제안이유

한국투자증권(주)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‘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’, ‘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’에 대하여 한국투자증권(주)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(붙임)

- 「舊자본시장법」 제47조(설명의무) 제2항
「舊자본시장법」 제57조(투자광고) 제6항
「자본시장법」 제249조의5(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) 제1호
「舊자본시장법」 제449조(과태료) 제1항 제21호 및 제25의2호
- 「舊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52조(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)
「舊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53조(설명의무) 제2항

「舊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0조(투자광고) 제3항 제6호

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271조의6(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) 제1항

「舊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별표22

-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12조(투자광고의 방법·절차) 제1항 제3호
-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제1항, 제3항, 별표3, 별표6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제1항,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 제1항,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제1항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제1항 내지 제3항, 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

다. 관계부서 협의

-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(2021.6.22.) 심의필

<별지>

한국투자증권(주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내용

☐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과태료 2,920백만원 부과*

*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

- 조치사유 :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,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
- 법적근거 : 「(舊)자본시장법」 제47조 제2항, 제57조 제6항, 제249조의5 및 제449조 제1항, 「(舊)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52조, 제53조 제2항, 제60조 제3항, 제271조의6 제 1항, 제390조 및 [별표22], 「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 제1항 및 제3항, [별표3] 및 [별표6]

2. 조치사유

가.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

- ☐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,

- 한국투자증권은 20xx.xx.xx. ~ 20xx.xx.xx. 기간 중 일반투자자 O명에게 O억원(O건) 상당의 환매가 불가능한 팝펀딩 펀드를 판매하면서,
- 해당 펀드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상당한 기간* 이내에 서명, 녹취 등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* 확인의무 이행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가입시점 미확인건을 일괄적으로 위반으로 보지 않고 '7일'이후 확인건을 위반으로 하였으나, 최근 제재심의위원회 판단기준인 '7영업일'로 변경하더라도 조치 건수는 동일

※ (참고)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확인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와 계약체결을 한 후에 설명의무 이행을 확인 받았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, 계약체결 이후 상당한 기간(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 필요) 이내에 설명의무 이행을 확인하여야 함(금융위 유권해석('12.2.17.))

나.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

- 금융투자업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고,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,
- 한국투자증권은 20xx.xx.xx. ~ 20xx.xx.xx. 기간 중 총 O명의 투자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O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운용전략, 수익률, 만기 등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면서
-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잔고가 1억원 미만인 비적격 투자자에게 광고한 사실이 있음

<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내역 >

구 분	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(자본시장법 §57⑥)	적격투자자 아닌 자에 대한 광고 (자본시장법 §249의5)	합 계 (중복제거)
발송점포(수)	28	32	38
발송직원(명)	63	92	108
수신고객(명)	21,763	57,095	57,486
발송메시지(건)	150	200	258

(붙임)

관계 법규

□ (舊)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47조(설명의무) (2021.3.24. 삭제)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,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7조(투자광고) (2021.3.24. 삭제) ⑥ 그 밖에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49조의5(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)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전문투자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할 것

제44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1. 제47조제2항(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(2021.3.24. 삭제)
- 25의2. 제57조제6항(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(2021.3.24. 삭제)

□ (舊)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2조(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) (2021.3.23. 삭제) 법 제46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.

1. 전자우편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
2. 우편
3. 전화자동응답시스템

제53조(설명 의무) (2021.3.23. 삭제)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(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관한 구조와 성격
2.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
3.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
4. 계약의 해제·해지에 관한 사항

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.

제60조(투자광고) (2021.3.23. 삭제) ③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3. 준법감시인(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) 사전 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

제271조의6(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) ① 법 제249조의5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"란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(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한다)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.

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.

[별표 22] 과태료의 부과기준(시행령 제39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 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타. 법 제47조제2항(법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(2021.3.23. 삭제)	법 제449조 제1항제21호	6,000
버. 법 제57조제6항(법 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(2021.3.23. 삭제)	법 제449조 제1항제25호의2	10,000

□ 금융투자업규정

제4-12조(투자광고의 방법·절차) ① 영 제60조제3항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”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.

1.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
2.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순자본비율, 영업용순자본비율, 최소영업자본액 등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하지 아니할 것
3.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
4. 투자광고계획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것
5. 협회의 투자광고안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
6. 투자광고문에 협회 심사필 또는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표시할 것

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

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,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

3. <별표3>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(1), (2)

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2> 과징금 부과기준, <별표3> 과태료 부과기준 및 <별표6>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<별표3> 과태료 부과기준

3. 예정금액의 산정

-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.

동 기** 위반결과*	상	중	하
중 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
보 통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
경 미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	법정최고금액의 20%

- * 중대 : 사회 경제적 물의야기, 금융기관 손실초래, 건전금융질서 저해
- 보통 : 중대,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경미 :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없는 경우 등

- ** 상 :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
- 중 :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
- 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<별표6>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

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자본시장법”이라 한다)」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(예정비율은 <별표3>에 따른다)

나. 「자본시장법」 제47조제2항, 제449조제1항제21호, 동법 시행령 제53조제2항(설명 내용 확인의무 위반, 준용규정 포함)

- (1) 위반건수 : 확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계약 건수
- (2) 위반결과의 판단 : 위반한 계약 건별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판단
 - 1) 중 대 : 판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
 - 2) 보 통 : ‘중대’, ‘경미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 - 3) 경 미 : 판매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

- ※ 설명의무는 이행하였으나 확인절차만을 누락한 경우 등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% 적용

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,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17조(과태료의 부과)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

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1. 당사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과 주소
 2.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,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
 3.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
 4.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
 5.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(864400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)
-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,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.

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본시장과	금융투자검사국
연 락 처	02-2100-2653	02-3145-7016